

KOICA ODA연구 · 교육원

최신 해외연구정보 동향

2025. 5.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A Machine Learning Approach to Assessing Multidimensional Poverty and Targeting Assistance Among Forcibly Displaced Populations

강제 이주 인구를 위한 다차원적 빈곤 평가 및 지원 대상 선정에 대한 머신러닝 접근 방식

강제 이주와 빈곤 증가 추세는 더욱 심화할 것이라 예상된다. 이에 정부 및 인도주의 기관들은 효과적인 대상자 선정을 위해 데이터 과학 접근법을 적용하여 현금 기반 지원 프로그램 대상 가구 지원 방식을 재설계하고 구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 및 인도주의 기관이 활용하는 대상 가구 선정 모델은 PMT¹ 접근 방식이다. 예상 소비 수준이 특정 임계값 미만으로 떨어지는 가구를 대상으로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PMT는 1인당 소비지출 관점에서만 빈곤을 측정한다. 이는 물가 변동 및 인플레이션 급등, 지역별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의 차이가 큰 국가에서는 정확성이 떨어진다. 둘째, PMT는 빈곤을 금전적 지표로만 정의할 시에는 적합할 수 있으나 식량 불안정, 주거 취약, 고용 기회 부족, 보건·교육·위생·식수 접근성 결여 등 다차원적 빈곤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적은 비용이 든 제한적인 표본조사 자료만으로도 다차원적 빈곤에 빠진 가구를 식별할 수 있는 실용적 도구 개발을 목표로 한다. 연구진은 레바논 내 시리아 난민으로부터 지난 4년간 수집한 지리공간 정보와 설문조사 데이터를 결합하고 이에 머신러닝(기계 학습)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대상 식별 전략을 개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다차원적 빈곤을 포착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특정 영역의 결핍을 겪는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리적 이질성이 대상 선정 효과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분석을 통해 드러났다.

본 연구에서 얻은 통찰은 빈곤 대상 선정 방식을 개선하고, 감소하는 인도적 지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려는 기관들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접근 방식은 유사한 데이터가 존재하거나 수집이 가능한 요르단과 같은 국가들에서는 실질적인 활용 가능성이 크나, 소규모 가구 자료조차 확보되지 않은 국가들에는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¹ proxy means testing

- ✓ 기관/학술지명: World development
- ✓ 문서종류: Article
- ✓ 발행연월: 2025. 4.
- ✓ 저 자: Angela C. Lyons et al.
- ✓ 주 제: Poverty
- ✓ 키 워 드: Multidimensional poverty
Forced displacement, Refugees,
Poverty targeting
- ✓ 출 처: <https://doi.org/10.1016/j.worlddev.2025.107013>

※ 저작권 보호 관계로 자세한 내용은 원문 링크 참조



Interlinkages Between Agri-Food Trade and the SDGs at the Global, Regional and Local Level

글로벌·지역·국가 수준에서의 농식품 무역과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간 상호연계성

본 연구는 농식품 무역(Agri-food trade)과 SDGs 간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차원에서의 상호연계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농식품 무역이 SDGs 달성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기회(missed opportunities)를 식별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글로벌, 지역, 국가 수준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진은 농식품 무역과 SDGs를 다룬 224편의 논문을 글로벌, 지역, 국가 수준으로 구조화하여 분석하고, 주요 농식품 품목별(수산물, 신선 과일·채소, 기타 열대작물 등)로 분류했다.

연구 결과, 글로벌 수준 논문에서는 경제 성장, 농민 생계 및 복지 증진, 생물다양성 보호, 온실가스 감축, 식량 안보 확보 등 다양한 관점에서 SDGs를 다루고 있음을 발견했다.

지역(regional) 수준 논문들은 글로벌 차원의 연구와 유사하지만, 특히 지역 시장 및 가치 사슬 발전 관련 논의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개별 국가(local) 수준 논문은 주로 연관성(association)에 기반하며, 인과관계(causality)를 입증한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예를 들어, 무역과 SDGs 간 상호작용 효과는 계량화되지 않거나, 측정 방법이 상이하여 상호 비교가 어려운 상황이다.

농식품 무역 내 SDGs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책 일관성, 이해관계자 참여, 지식의 실질적 적용이 중요하다. 복수의 목표를 통합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인데, SDGs 간 상충 효과(trade-offs)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농업 생산 확대는 글로벌 수요 충족에 기여하지만 산림 파괴 및 생물다양성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농식품 무역과 생계 향상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개선, 무역 시스템 내 다부문·다수준·다행위자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 이는 지속가능한 농식품 무역 시스템을 위한 필수적 기반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진은 SDGs 달성에 농식품 무역이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무역 이익이 불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체계적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혁신, 정책 및 행동 변화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 ✓ 기관/학술지명: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 ✓ 문서종류: Review Article
- ✓ 발행연월: 2025. 4.
- ✓ 저 자: Armah N. A. Ralph et al.
- ✓ 주 제: Agriculture
- ✓ 키 워 드: Agri-food, Economic, Social Environmental, Guidance, Trade, SDGs
- ✓ 출 처: <https://doi.org/10.1002/jid.3994>

※ 저작권 보호 관계로 자세한 내용은 원문 링크 참조



Transforming Laws and Norms to Achieve Universal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보편적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실현을 위해 법과 규범 전환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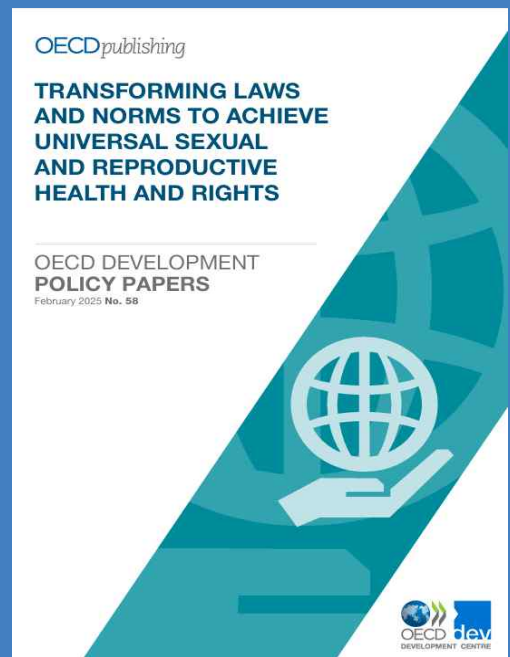
성 및 재생산 건강과 권리(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SRHR)는 성평등 실현, 빈곤 감소,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근본적 요소다. 지난 수십 년간 산모 사망률 감소, 현대 피임법 접근성 향상, 출산 관리 숙련도 개선 등 SRHR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소녀들의 SRHR은 여전히 차별적인 법·제도와 사회 규범으로 인해 불균형적으로 제한받고 있다. 실제로 전 세계 여성의 50% 이상이 본인의 재생산 권리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는 그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정책 보고서는 보편적인 SRHR 보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핵심 정책 수단을 제시한다. OECD 개발센터의 사회 제도 및 성평등지수(Social Institutions and Gender Index, SIGI)를 기반으로, 본 보고서는 사회 규범과 법·제도적 틀이 전 세계적으로 SRHR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아울러 권리 증진과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는 사람들의 실제 수요를 이해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전 세계의 우수 사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변화와 진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정책 조치를 제안한다.

특히 의료 인프라 확충, 차별적인 법 개정, 성평등한 사회 규범 제정 촉진, 포괄적 성교육 제공, 교차 요인을 반영한 데이터 시스템 강화가 핵심 과제로 제시된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SRHR에 대한 접근성과 권리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 ✓ 기관/학술지명: OECD Development Center
- ✓ 문서종류: Policy paper
- ✓ 발행연월: 2025. 2.
- ✓ 저 자: OECD
- ✓ 주 제: Gender
- ✓ 키워드: Health, Gender Equality, Health inequality and universal health coverage, SDGs
- ✓ 출처: <https://doi.org/10.1787/9244e414-en>

※ 저작권 보호 관계로 자세한 내용은 원문 링크 참조



An EV-Fix for Indonesia: The Green Development-Resource Nationalist Nexus

인도네시아를 위한 전기차 해법:

녹색 개발과 자원 민족주의의 연결고리(넥서스)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탈탄소화가 요구되는 기존 산업구조에 변화가 일고 있다. 한편, 자원 부국들은 에너지 전환 광물(energy-transition minerals)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이익을 얻고 있다. 이에 기관 투자자들과 각국 정부는 천연자원 채굴과 양립가능한 기후 정책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한다: “에너지 전환의 흐름 속에서 자원 채굴 기업집단은 자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떻게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재편해왔는가?”

본 논문은 인도네시아의 니켈 추출, 리튬 배터리 생산, 전기차(EV) 산업에 이르는 가치 사슬에 초점을 맞추며, 탈탄소화, 개발주의, 자원 민족주의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자원 자본이 쇠퇴하는 정당성을 ‘전기차 수단(EV-fix)’을 통해 극복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이는 단순한 이념적 전환을 넘어서는 것으로 국가 자본, 국내 대기업, 정치 세력, 그리고 국제 배터리 및 전기차 제조업체 간 새로운 연합이 녹색 개발-자원 민족주의 결합체 (Green development-Resource nationalist nexus) 하에서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EV-fix 사례는, 글로벌 녹색 정치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주요 행위자가 바로 화석 연료, 토지, 노동력 착취를 통해 이익을 얻어온 채굴 기업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전기차 정책과 선별적 위험 회피는 환경 정치(Environmental Politics) 연구자들이 인도네시아 지역 정치인의 행위성과 이해관계를 단순히 기업이나 외부 세력에 의해 포섭된 결과로 볼 것이 아니라, 국내 기업과 글로벌 투자자 간 복잡한 연합을 조율하려는 주체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특정 형태의 전기차 정책이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관계를 보다 정교하게 이해하고 설명하며 예측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EV-fix: ‘전기차(EV) 산업으로 전환 해결책’으로서 Harvey(1982)와 Glassman (2007)의 공간적 해결(spatial fix) 연구를 인도네시아의 전기차 가치 사슬(니켈 채굴부터 EV 제조)과 연결하여 구체화시킨 본 논문 상의 이론적 개념이다.

✓ 기관/학술지명: Environmental Politics

✓ 문서종류: Article

✓ 발행연월: 2025.4.

✓ 저 자: Trissia Wijaya a,b and Lian Sinclair

✓ 주 제: Clean Energy

✓ 키 워 드: Transition minerals Critical minerals Spatial-fix Legitimacy, Nickel in Indonesia

✓ 출 처:

<https://doi.org/10.1080/09644016.2024.2332129>

※ 저작권 보호 관계로 자세한 내용은 원문 링크 참조

